

입시철과 地方大學의 위상

崔 泳 太

(全南大 史學科)

우리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 대학입시라는 큰 행사를 치르게 된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수험생 및 그 가족들을 모두 합치면 이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숫자만도 아마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수험생의 친척과 미래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을 합친다면 입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결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은 바로 이 중요한 행사를 주재하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중요한 행사에 임하는 지방대학 구성원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못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 소재 대학 선호 경향에 밀린 나머지 대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새로운 가족맞이 행사에서 도저히 소속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소재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최근의 경향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제는 아예 서울 소재 대학이면 무조건 지방 소재 대학보다 우선시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일선 고등학교와 언론에서는 숫제 서울에 소개하는 대학들에 몇 명이 합격했는지의 여부로 명문고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하기까지 한다. 이레가지고 어떻게 지방대학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는가?

지방대학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일차적 책임은 물론 지방대학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지방대학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반성과 시정 노력만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훨씬 구조적이고 악성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연유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병폐 중의 병폐인 서울 중심주의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들이 서울을 선호하는 것은 곧 그곳에 권력과 부와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 갖고 있는 이 매력점이 대학교육을 신분상승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식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그대로 놔둘 리 만무하다. 서울에 소개하는 대학을 나와야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출세에서 앞설 수 있다는 논리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머리속에서 거의 보편화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심리와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보편적 심리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 얼마 후면 대학지망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대학들 중 상당수가 지방자가 감소해 하나씩 둘씩 폐교의 운명을 걸고 있는 농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신세로 전

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쪽은 사람이 넘쳐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요즈음 국제화, 개방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말인데 이 파행적인 교육 풍토를 그대로 놔둔 채 단순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만을 모색한다고 선진국,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지만 한국 교육에서 대학의 지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 대학교육은 단지 고등교육만을 담당하는 여러 교육 단계 중의 단순한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이정표에 해당된다. 이 점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인구의 적절한 분산이, 그리고 교육의 발전이 우리보다 더 큰 나라,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들과 경쟁해 이기고, 그리하여 더 강한 나라,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판단이 설다면 지방대학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먼저 교육부는 지방대학 정책의 질적 발전에 관한 보다 전진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학정원 조정시에 지방소재 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만이 지방대학 육성책은 아니다. 질적인 대책이 서 있지 않은 가운데 양적인 발전만 조장하는 것은 곧 미래의 폐교 학교 수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제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대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상당 부분이 교육 외적인 측면으로부터 유래된 데다가,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부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육부는 그 대책을 세울 때 단순히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형평성의 논리로부터 벗어나 별도의 차원에서 발전책을 모색해야 한다. 굳이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려거든 지방대학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리함까지 감안한 형평의 논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특히 지방대학생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취업 문제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도 대부분 어려운 입장에 있겠지만 그러나 지방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단순히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선의의 경쟁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입시철에 지방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업률 저하는 수험생의 지방대 기피현상을 낳고 그것은 다시 지방대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거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말장난으로 그쳐 버렸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응답하여야 한다. 국영기업체 등 정부의 입김이 보다 강하게 미치는 곳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게 하면서 일반 기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대학 당사자들이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학행정을 떠맡고 있는 사람, 교수협의회, 학생회 등은 대학 내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오직 지방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방대학의 미래가 밝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관계자들간의 긴밀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본다. ■